

국방부 업무보고 -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-

《 핵심 추진과제 》

- 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 ②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
- ③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④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
- ⑤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⑥ 2040년 군구조 개편 추진
- ⑦ 준4군체제로 해병대 개편 ⑧ AI·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강군 육성
- ⑨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⑩ 군사시설 규제개선
- ⑪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⑫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
- ⑬ 국가정상화 과제

□ 국방부 (장관 안규백) 는 8월 5일 (수) 10시,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업무보고를 실시 (외교부, 통일부, 국가보훈부 합동) 하였습니다.

○ 업무보고에는 국방부·합참·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와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.

□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를 보고하고, 후반기에는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전방위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는 한편, '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' 구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

□ 오늘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보고한 핵심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

신속하고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한 국민의 군대 재건, 국민 신뢰 회복

-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내부 수사와 고강도 감사를 통해 약 200여 명의 관련자에 대해 인사 징계, 형사조치 등 신상필벌을 하였습니다.
- 또한, 군 정보기관이 '국가 안보'와 '장병 보안'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하였으며, 정보본부의 겸직구조를 분리하였습니다.
- 더불어, 장병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신념화 할 수 있도록 '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'을 필수과목으로 반영하고 간부들의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.
- 후반기에도 남아있는 내란 청산의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하여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②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

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전작권 회복 추진 가속화

- 한미는 국방장관회담 (5.11.), KIDD (5.12. ~ 13.)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해 「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」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성과들을 검토하고,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.
- 후반기에는 국방역량을 집중하여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,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(SCM)에서 완전운용능력(FOC) 검증 및 회복시기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- 또한,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 완전성 제고를 위해 「종합추진계획」을 발간하였고, 올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하여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③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

국가역량을 결집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 下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핵심 전략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

- 「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」을 발표 (5.26.)하여 국가적 숙원사업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대내외에 공식화하였으며, '27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,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
- (특별법) 「핵추진잠수함 특별법」을 연내 제정하여 본격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- (원자력안전) 특별법을 토대로 국방부가 원자로와 관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및 승인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.
- (對美·IAEA 협의) 미국과 핵연료 확보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, IAEA와 협의를 통해 핵연료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핵잠용 핵연료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
④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

북핵·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억제력 강화와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추진

-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, 중고도 정찰용무인기, 천궁-II 등 핵심전력(36개) 전력화를 추진하고,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.
-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위한 내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KF-21 전력화, 고위력미사일 확충 등 핵심전력을 지속 보강하여 독자적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으며, 고출력레이저를 활용한 저비용·고효율의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 하겠습니다.

⑤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

군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,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

- (간부 보수 획기적 인상) '29년까지 하사 1호봉의 보수를 4,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, 향후 중견간부 연봉은 유사 직군 및 유사 경력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군인의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복무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.
- (군 주거정책) 관사는 정주(定住) 여건이 좋은 거점지역에 타운화하고 민간주택을 활용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.
- (병영독서 활성화) 신병 독서코칭, 도서지원과 병영도서관을 개선하여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 및 자기개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

⑥ 2040년 군구조 개편 추진

2040년을 목표로 우리 군을 'AI 기반 유·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첨단기술집약형 군구조'로 전환하도록 개편 추진

- 미래전 양상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'스마트 정예강군'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,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을 거쳐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.
- (부대) 전·평시 위협을 고려하여 구조와 편성을 효율화하고, 유·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예비전력 정예화 등과 연계하여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.
- (전력) 전투효과 증대를 위해 AI 기반의 드론·대드론 체계와 우주·사이버·전자기 등 전영역 전력을 강화하고, 예비전력을 상비부대 수준으로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.
- (병력) 현역병은 감축하고 '기술집약형 부사관'은 증원하여 간부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고, 상비예비군 및 민간자원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- 2040년까지 3단계로 단계화하여 추진하고, 2030년까지는 첨단전력 증강을 고려하여 병력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1단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.

⑦ 준4군체제로 해병대 개편

해병대를 현재와 같이 해군 소속으로 두되,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·감독권을 부여하여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위상을 정립

- 국군조직법을 연내 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병1·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전환하겠습니다.
-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하여 해병대사령부 내 작전본부 편성('27년 초)과 해병작전사령부 창설('28년 말)을 추진함으로써 준4군체제에 부합하는 작전수행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

⑧ AI·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

AI·드론·유무인복합체계 확대적용을 통해 미래전 주도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으로 스마트 강군 구현

- 국방 AI 및 로봇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 하였으며,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 등 민·관·군 협업을 통해 AI·드론·유무인복합체계의 확산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.
- 후반기에는 국방 AX 거점 구축과 국방 AI 가속화 사업을 본격화하고 AI·드론·로봇 등 첨단전력의 신속·유연한 도입을 위해 「국방첨단전력사업법」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- 한편, 상용드론 군 활용성 검증을 위한 혁신 Lab 운영, 드론 실증전담부대 확대,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국내 드론업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⑨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

사관학교 위상 회복, 미래전 양상 변화 대응 및 전작권 회복 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세계 일류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

-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시행하고 「국군사관학교」 설치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-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 조성 and 우수 교수진 확보, 국립대 교수 수준의 처우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세계 일류 사관학교의 창설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.

10 군사시설 규제개선

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군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

- 민통선 내 작전수행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 '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고,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겠습니다.
-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의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.

11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

경기북부 미군기지 조속한 반환 및 정부 차원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추진

- 경기 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장기임대, 지방정부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개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.
- 후반기에는 경기북부 미반환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한 대미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연내 완료하여 반환공여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.

12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

광주 군 공항 지연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여 원활한 이전사업 추진

- 6자 협의체와 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 무안군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 (4월)하였으며,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(6월)하여 지역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.
- 향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,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여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습니다.

13 국가정상화 과제

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

- 12·12 군사반란, 5·18 민주화 운동 및 계엄업무 관련자 등 부적격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였으며, 앞으로 군 표창 취소 및 환수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.
-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와 정비 계고기간을 운영하고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와 시설물 철거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.

□ 끝으로,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를 토대로 후반기에도 추진동력을 이어가며, ‘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’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
아울러, 전시 작전통제권 회복, 국군사관학교 창설, 국방개혁 등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 핵심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,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<끝>

담당 부서	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과	책임자	국 장	우 경 석	(02-748-6200)
		담당자	과 장	이 동 명	(02-748-6210)